

제303회대구광역시의회(임시회)

건설교통위원회회의록 제1차(부록)

대구광역시의회사무처

【검토보고서】

대구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1. 검토경과

- 발의일자 : 2023년 8월 25일
- 발 의 자 : 김대현·권기훈·김원규·김재용·박창석·윤영애·전태선·
정일균 의원
- 회부일자 : 2023년 8월 28일

2. 제안이유

- 기존 공동주택에서 경비원 등 공동주택 관리 종사자를 위한 휴게공간을 추가적으로 축조하는 경우 현행 법령상 위반건축물로 분류되어 이행강제금 등이 부과될 수 있어, 이를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대상에 포함하여 공동주택 관리 종사자의 근무환경 개선에 이바지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공동주택 관리 종사자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휴게·경비 시설을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 대상으로 추가함(안 제22조제3항 제5호 신설)

4. 검토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경비원 등 공동주택 관리 종사자(이하 “종사자”라 한다)를 위한 휴게공간을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 대상에 포함 시킴으로써 종사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근무환경을 개선하려는 것으로,
- 「건축법」 제20조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의 가설 건축물은 허가대상이 아닌 신고대상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5항제6호에는 조립식 구조로 된 경비용으로 쓰는 가설건축물이 명시되어 있으며, 같은 항 제16호에서는 제1호부터 제1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것과 비슷한 것으로서 건축조례에서 정하는 건축물을 신고대상 가설건축물로 규정하고 있어 종사자를 위한 휴게·경비용 조립식 구조물을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대상에 포함시키려는 본 조례 개정에 특별한 법률적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됨.
- 「산업안전보건법」의 개정으로 지난 8월 18일부터 상시적으로 근로하는 경비원·청소원이 2명 이상이고 상시근로자가 10명 이상인 공동주택 단지는 근로자를 위한 휴게시설을 설치해야 하며, 휴게시설 미설치 시 1,500만원, 설치·관리기준 미준수 시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됨.

- 그러나 금년 1월 발표된 고용노동부의 ‘대학교·아파트 휴게시설 설치 의무 이행 점검 결과’를 보면 94개의 아파트 중 40개(42.5%)의 아파트가 휴게시설 설치 관련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 대학교·아파트 휴게시설 설치 의무 위반 사업장 현황 >

(자료출처 : 고용노동부, 단위 : 개소)

합 계		대 학교		아파트	
대상	위반(율)	대상	위반(율)	대상	위반(율)
279	124 (44.4%)	185	84 (45.4%)	94	40 (42.5%)

- 대전광역시노동권익센터에서 지난 8월 발표한 ‘대전지역 소규모 사업장 휴게시설 설치 및 노동환경 실태조사’¹⁾ 결과에 따르면, 36%의 공동주택에 휴게시설이 미설치되었고, 미설치 사유 중 46%가 공간이 좁거나 없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휴게시설의 26%가 지하에 설치된 것으로 나타남.

1) 대전지역 소규모사업장 휴게시설 설치 및 노동환경 실태조사 종합보고서

- ▶ 조사기간 : 2023. 4월 ~ 6월
- ▶ 조사대상 : 상시근로자 20인 이상-50인 미만 사업장(10%- 20인 미만 사업장)
- 소규모사업장 노동자 533명(310개 사업장) 설문조사 응답, 개별면적 5명 진행
- ▶ 조사기관 : 대전광역시노동권익센터

※자료출처 : 대전광역시노동권익센터 홈페이지

(https://www.djiw.or.kr/app/board/view?md_id=document&code=1783&page=1)

- 위탁관리 공동주택의 경우 휴게시설 설치 의무는 경비원 등을 파견하는 주택관리업체에 있으나, 입주민들의 소유로 되어 있는 공동주택 내에 휴게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므로 입주민들의 동의와 협조가 있어야만 휴게시설 설치가 가능하다는 어려움이 있고, 오래된 공동주택의 경우 공용공간 부족으로 휴게시설 설치를 위한 공간확보가 어려운 상황임을 감안하면 종사자의 휴게·경비시설을 위한 가설건축물을 축조 신고대상에 포함시켜 휴게시설 설치를 용이하게 하고자 하는 본 개정조례안의 필요성은 충분하다고 판단됨.
- 본 조례 개정을 통해 건폐율이나 용적률의 상한으로 인해 휴게시설 설치가 어려운 공동주택의 경우 가설건축물 축조로 설치가 가능해짐에 따라 휴게시설 설치 의무 이행률을 높이고 휴게시설의 지상 설치 비율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종사자들의 휴식권을 보장하고 휴식의 질을 높임으로써 종사자의 건강권 확보와 근무환경 개선뿐만 아니라 안전사고의 위험을 낮추는 것에도 기여할 것으로 사료됨.
- 다만 휴게·경비용 가설건축물 축조에 있어 연면적 30㎡ 이하, 1개 층 한정, 옥상설치 불가, 독립적 설치, 도시미관 저해 금지 등의 규정이 준수될 수 있도록 가설건축물에 대한 철저한 점검과 관리가 필요하겠음.
- 이상으로, 대구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